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법 제정의 당위성



정영채 회장
(가축분뇨자원화협회의)

최 근 우리의 축산은 개방에 대처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는 정부대로, 업계는 업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국제곡물가격의 인상으로 인한 국내사료가격의 계속적인 인상, 인건비 상승과 3D현상으로 인한 인력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최근 환경 오염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가축 분뇨의 처리문제는 우리의 축산현장을 매우 곤혹스럽게 만들어 가고 있다.

법에 묶이고, 언론에 시달리고, 때로는 소비자로부터 외면까지 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 축산이 처한 입장이다.

지금까지 우리 축산은 생산성을 제고하는데만 힘을 기울여 왔던 것도 사실이다. 또 지금까지 가축의 분뇨는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버릴수 없는 귀한 자원으로만 생각한 나머지 우리의 생활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을 지나쳐 버리고, 가축분뇨에 의한 오염 방지 내지는 처리에 대한 노력도 소극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주변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가축분뇨의 처리문제는 축산인 모두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로 축산영농을 계속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를 판가름하는 관건으로까지 부상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가축분뇨의 처리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축산이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과거에 미련을 가지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방어적인 생각과 경영방식은 이제는 허용될 수가 없다. 축산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란 일부 국민의 그릇된 인식을 잘못된 인식으로만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며, 이제 우리는 우리의 축산 산업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보전을 위하여 축산이 필수적인 산업이란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얻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미 생활환경의 보전이, 일부 식량생산 보다 우선한다고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인 추세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오늘날 가축분뇨의 처리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축산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우리보다 더 많은 고민을 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과정이 축산 발전의 역사요 축산 선진화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 어떤나라도 축산을 포기한 나라는 없다.

축산업은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특히 그 나라가 선진화하면 할수록 국민의 식량생산 산업으로 안정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됐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축산농가의 보호를 기본 방향으로 한 가축분뇨 처리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현대 환경보전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 규제의 강화는 축산농가로 하여금 축산영농을 포기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 환경보전을 위한 법규는 얼마든지 강화 될 수 있고, 쉽게 공감을 얻어 만들어 낼 수 있지만, 이를 실천 할 수 있는 연구와 시설은 그리 쉽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법규 또한 늦어질 수 밖에 없다. 이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수반되어야하며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 과정에서 축산 농가만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환경 규제만을 강화하고 강요 하는 것은 마치 먹기만 하고 배설은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생물이 생존하는 데는 먹고 배설하는 것이 균형을 이뤄야만 한다.

오늘날 사람을 비롯한 동물의 먹이가 배설물과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거나, 자기를 마치 무배설 생물체로 착각하며, 가축은 분뇨만을 배설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오물 발생기로 착각하는 이가 많다. 고기를 비롯한 축산물을 수입해서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다. 그는 가축을 사육하여 수출하는 나라가 외계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나뿐인 지구 환경을 보존하는데는 그 누구도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대책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 대책은 먼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연의 순환 원리에서 찾아야 한다. 생산된것을 쌓아 놓지 말고 이용하도록 해야한다.

결국 생물의 생활 환경 속으로 끌어 들여 이용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자원화하여 재활용하는 길을 택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서 기존의 환경보전법이나 오수·분뇨 또는 가축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하여 논하고 싶지는 않다.

가축의 분뇨를 이용가능한 새로운 자원으로 만들어야 하고, 활용이 가능한 새로운 자원으로 만들기 위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원화하고 이용할 수 있는 법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결국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처간의 합의에 의한 환경보전과 축산영농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일관성있는 정책의 수행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제와 단속만을 고집한다면 불화와 불신만 쌓이고,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 누구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